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3.2.28. _ Vol.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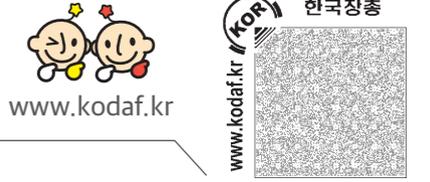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2023년 계묘년은 새로운 정부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한해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2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중심점이 되어줄 2023년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소개한다.



01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 배경

■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 과제 선정, 현안 중심의 활동 적극 진행

-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여 왔음
- 매년 장애계가 추진할 공동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장애인단체, 언론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9년~2014년 10대 정책 활동 과제 선정, 2015년부터 5대 정책 활동 과제 선정

■ 장애인단체의 핵심 역할인 연대와 대안 마련

- 장애인 문제는 개인 및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도개선과 권익증진을 달성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과 활동 전개가 필요함

2022 장애계 정책 활동 주요 추진 경과

- 제20대 대통령선거(3월)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치러졌던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요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음. 2021년부터 장애계는 ‘2022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각 대선 후보들에게 ‘3대과제 10대 핵심공약’을 전달하고 장애인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대해왔음. 또한 민선8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음

- 아울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제5차 계획 수립 당시 장애계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듯이 장애유형별 포괄적 정책마련을 위해 장애계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의견을 전달, 참여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장애인권리 보장법이 임기 중에 제정되지 못하고, 탈시설 이슈를 통해 장애인자립지원로드맵이 발표되어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어지는 중요 과제들의 과도기이기도 한 한해, 장애인 자립지원과 맞춤형 주거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산재한 정책과제 속에서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해 장애계가 지혜를 모으고 긴밀하게 협력한 한해였음



02 2022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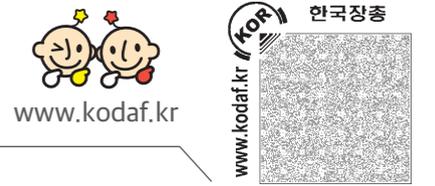
-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계는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공약으로 제안해옴
- 지난 18대, 19대 대선 시 주요 후보의 공약이자, 지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에 대해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제21대 국회 내 추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수립이 요구됨
- 기존 기본법 제정 요구 움직임과 2018년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 연구(책임연구: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 2021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에 '기본법+서비스법 이원화'에 대한 논의 구조를 이미 가져온 바 있음
- 대통령 선거 공약요구, 새 정부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 요구 등 정책 활동 속에 권리 보장법 제정 이슈를 포함함과 동시에 21대 국회 논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권리 보장법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 장애인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계 통합안) 제정 필요성 공론화

- 제20대 대통령 선거 요구공약 및 제6차장애인정책종합 계획 포함 요구 정책활동 전개
-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정책 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도입)
-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
- 21대 국회 내 제정 논의 요구 정책 활동

추진 경과

- 대선 후보자 공약 촉구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요구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기본소득 보장, 단체 소송 도입 등
- '22.01.25.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초청 간담회
- '22.04.0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요구사항 제안
- '22.04.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초청 간담회
- '22.04.07.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장애인 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공청회 증인 추천
- '22.09.2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보고서 과제 제안 : 장애정의 수정·장애판정도구 개정·장애유형 개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기본소득 또는 표준소득 보장제도 도입, 중복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등
- '22.11.01. 이종성 국회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신규)



2.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 활동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시설 필요성 및 폐쇄 찬·반 양론에 빠져 법제정 논의를 비롯해 포괄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 다양한 해결 지향점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속적 정책 요구 활동이 요구됨

- '22.11.29. 보사연 연구 종합과제 내 포함 (7차 총괄위 기준)
- '23.01.31. 정부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 기반과제 '9. 장애인정책추진기반 강화' 내 관련 과제 포함(공청회 자료 기준)

핵심 성과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과 승계 관점, 제6차 종합계획 내 추진 과제 포함. 법제정 촉구활동 근거 마련

- (장애개념 확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장애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장애모델 도입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논의 지원('23~)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혜영('21.9), 김민석('21.10), 최혜영('21.11), 이종성('22.11)
- (거버넌스 강화)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또는 現위원회 산하 사무국 신설 국회 논의 지원('23~)
- 범정부 장애정책 전달체계 점검 연구('23)를 통해 실태 분석 및 분절적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고 법·제도 개정 추진('24~)

향후 과제와 전망

■ 제21대 국회 내 법안 논의 및 제정 촉구활동 추진

- 장애인 제정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법) 중심 국회 내 재논의 촉구, 장애계 의견수렴 및 반영 통한 법 제정 추진

■ 지방선거-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활용, 자립 및 주거지원 정책 요구 활동 전개

■ 정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정책개선 요구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자문단회의 참여.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장애유형별,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정책 요구

-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마련 토론회 및 공론화, 정책 건의

추진 경과

- '22.04.30. "어디서, 누구와 살지 결정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 장애인정책 리포트 발간을 통한 이슈화
- '22.04.14.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비교 지표 추가(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를 통한 전국 비교 데이터 확보
- '22.04.~05.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남, 제주 6개 지역 탈시설 및 자립지원 지방선거 공약 요구
- '22.06.16.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전체회의의 참여



- '22.09.2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 보고서 과제 제안 : 주거마련 전용 대출제도 신설 및 주거비 지원 강화, 서비스 유형 및 제공인력 다양화 등
- '22.11.30.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정책건의(국회의원 이종성·최혜영·장혜영,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23.02.02.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자문단 회의 전체회의 참여
- 기타, 탈시설 대안 마련 및 활동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포스트 발행 9건, 유튜브 영상 게재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한국장총, 2022.11.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핵심 성과

■ 선거 공약 및 이슈 공론화에 따른 정책 반영 도출

- 탈시설 및 자립지원 지방선거 요구 공약 수용
- 서울장애인선거연대/서울 송영길·권수정 후보, 오세훈 시장 이행계획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대책 마련 촉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등급하락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에 대한 릴레이 포스팅(9건)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 유지 계획 발표(6.2)
- 최연숙 국회의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6) : 활동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지원종합 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 포함하여 알 권리 보장

향후 과제와 전망

■ 주거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촉구 활동 추진

- 정부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자립·주거지원 강화’ 정책 분야 내, 실무추진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거지원 관련 제안 과제(7차 총괄위 기준) 상당수가 누락 발표됨 ('23.01.31. 공청회 자료 기준)
- 따라서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주거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추진 요구 활동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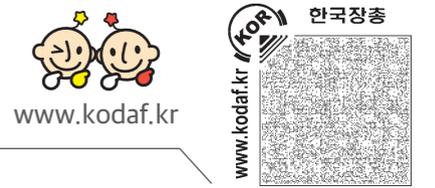
3.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20여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하여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요구를 진행(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한 바,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수립 과정의 참여 확대 및 정례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의 진행상황 및 성과 등을 정부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장애인 관점에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과평가 기반 정책방향 제시

- 장애 재정의, 장애주류화, 전달체계 및 정책조정기능 강화
- 고령화, 4차산업혁명 인구조구 변화 반영



■ 장애유형별, 직능별 포괄적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참여

- 연구과정 미 참여 단체 연대 구성 및 의견수렴
- 실제 논의 구조 속 제안 검토 및 결과 확인

추진 경과

- '22.06.08.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단체 제안 마련 참여 요청(전문위원 구성 및 36개 장애인단체 TF 구성)
- '22.06.20.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마련 1차 회의실시(연구방식 및 절차 논의, 분야 및 과제분류, 추가 참여단체 추천, 단체별 역할 분담)
- '22.06.20.~7.10. 각 단체별 역할 분담 과제 작성 및 초안 제출
- '22.07.1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마련 2차 회의실시 (각 영역별 제출 과제 내용 공유 및 추가 제안 논의/제안작성 가이드 논의, 공유)
- '22.07.11.~8.3. 각 단체별 역할 분담 과제 작성 및 제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정리
- '22.08.4.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마련 3차 회의실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제안마련 TF (한국장총, 2022.08.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2.08.4~8.1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전문위원 검수 및 정리
- '22.08.17. 장애인단체 마련 초안, 보건사회연구원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실무추진단 사무국 전달
- '22.08.18. 보건복지부 소관단체 연수, 제안관련 추진경과 발표 및 의견수렴
- '22.09.02. 보건사회연구원 제6차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방안연구 실무추진단 제4차 총괄위 논의(장애인단체제안과제 반영률 44%)
- '22.09.07. 제2차 장애인리더스 포럼 (보건사회연구원 진행사항 공유 및 단체 리더 의견수렴)
- '22.09.7~26. 최종보고서 원고 검토 및 최종 수정 보완 작업
- '22.09.2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
- '22.12.30.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장애인정책 리포트 발간을 통한 이슈화
- '23.01.31. 정부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참여 (한국장총, 장총련)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보건복지부, 2023.01.31.) ©더인디고



핵심 성과

CRPD 관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이행 평가 및 제안

- 우수(27.1%), 미흡(65.7%), 열악(7.2%) 3단계로 평가 : 장애인권리협약 관점에서 누락된 조항도 있어 추가 정책 과제 제안(장애아동, 생명권, 사법 접근, 고유의 보호 등)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장애계 의견반영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분과별 논의시 참고 및 회의자료 활용 : 최종 제7차 총괄회의 기준 57.6%(68개) 장애계 제안과제 반영

정부정책 지향점과 방향성 제시, ‘종합과제’로 반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내 종합과제 반영
- 장애개념 재정의, 장애주류화 및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전달체계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참고)

향후 과제와 전망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반영 과정 정례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2017.4)에 이어 장애유형별, 직능별(총 36개 단체) 포괄적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성과
- 향후, 정부 공식 계획수립 체계 미참여 단체 포함 포괄적 의견 수렴을 위한 단체 제안 정례화 지원 필요

지속적인 정부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 포괄적 고령화 정책 수립, 주거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장애통계 생산·관리·활용 강화 등 최종 계획 포함 요구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전 정부) 성과 계승 계획의 내실화 요구
- 서비스종합조사 및 장애인정 기준 개선, 자립지원 로드맵 내실화, 제정법 통과 등
- 향후 5개년 중 하반기 ('25~'27) 주요 과제 관련 청사진 마련 요구
- 개인 예산제·자립지원로드맵 및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CRPD 최종견해 및 개인진정제도 이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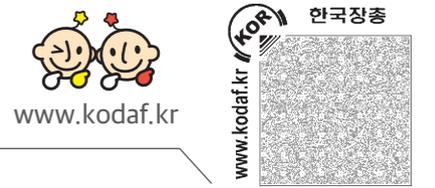
4. 대통령·지방선거연대 활동 및 유권자 운동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의 준비와 진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성과 점검은 물론 차기 정부에게 요구할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대선 및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핵심공약 위주 공약 반영 요구 및 평가 활동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요구 활동과 병행, 정책 반영 요구
- 지역 현안 중심 지방선거 연대 네트워크 구성, 유권자 운동 전개



추진 경과

2022 대선장애인연대

- 장애계 공약 요구 :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초청 간담회(1.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요구 사항 제안(4.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초청 간담회(4.18)

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21.11) 핵심 정책방향

- 복지, 고용, 교육 뿐 만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이 항상 장애인을 고려해야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이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 장애인의 자립이 궁극적으로 가능하려면 사회 환경이 변화해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

정당별 장애인공약 비교

- 장애인공약, 여전히 미완성이다 논평(2.17), 주요 후보 장애인공약 및 대선연대 공약 비교(2.22), 대통령후보들의 장애인공약 성적표 비교(2.28)

요구공약 반영정도 및 장애인공약 평가

- 새정부 장애인정책 비전제시 논평(4.20)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정보 제공

- 장애유형별 유권자 편의 안내(3.3), 지상파 3사 및 기타채널 선거 개표방송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 방송시간 알림(3.9)

장애인선거 참정권 이슈 공론화

- 지상파 3사 선거토론 방송 다중 수어통역사 배치 촉구 논평(2.23), 장애인배제하는 지방선거 유권자 심판만 남았다 논평(5.19), 2022 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는 사라졌나 논평(6.3)
-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의 삶

변화시킬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2.28) 통한 이슈화

- 장애인공약 정보 및 투표편의 관련 포스트 발행 7건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416호 (한국장총, 202202.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지역별 선거연대 구성 및 공약 요구활동 (3~5월)
 - 서울 등 14개 지역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구성 및 출범(대구, 강원, 전북 제외)
 - 12개 지역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
 - 10개 지역 공약 전달식, 정책협약식, 후보자 초청간담회 등 공약 전달
- 장애인유권자 정보제공
 - 정당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공유(한국장총 홈페이지 및 SNS), 장애유형별 투표편의 등 정보제공(5.31)
-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및 당선권 내 배정 요구
 - 중앙, 부산, 충남 3개 지역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장애당사자 정치역량 강화방안 마련” 건의(4.14)



• 장애인선거 참정권 이슈 공론화

- “2022 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는 사라졌나” 논평 배포(6.3)
- 지방선거연대 활동 포스트 발행 12건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 내 과제 제안 : 장애인 비례대표 등 정치참여 보장

핵심 성과

■ 2022 대선장애인연대

• 장애인당사자 욕구 실현 위해 후보자 공약 및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 2022대선장애인연대 활동을 통해 개발한 장애계 요구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수용 제안 : 이재명후보 6개(60%), 윤석열당선인 1개(10%), 심상정 후보 3개(30%) 반영 (10대 핵심공약 기준)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건강권 보장강화, 원스톱 통합예약 서비스 구축,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모델 개발 등의 과제 포함

■ 2022 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2022서울지방선거 장애인연대 공약 이행계획 확인 결과 3대 핵심요구공약 기준 55.6% 공약 수용
- 장애인지적 서울시정책 조례 제정 및 장애인지정책조정관 운영, 장애포괄 서울 D.N.A 전략 수립,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시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및 병·의원 접근성 확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주거공급 확대

- 전국 장애당사자 광역·기초 비례대표 당선인 (광역 8명, 기초 6명) 소개, 지역별 장애인 요구공약 TOP3, 장애유형별 투표정보 등 카드 뉴스 평균 조회수 3,000회 이상, 20회 이상 공유

향후 과제와 전망

■ 윤석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 및 장애인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비교 연구 등 연계 통해 공약 및 정책 이행 모니터링. 개선 요구 등 정책 활동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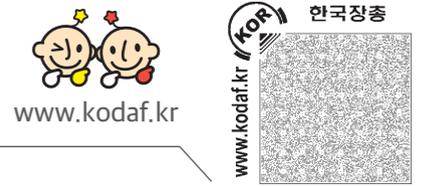
5.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정책 활동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증차, 광역간 이동시스템 구축,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마을버스 확대 등의 정책 이행 촉구, 모니터링과 더불어 일상생활 이동과 밀접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음

■ 대선 공약요구 및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과제 내 이동 접근성 향상 과제 반영 위한 정책 활동

- 대선장애인연대,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단체제안 활동을 통한 이동권 개선 정책 요구



■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 정책 점검과 모니터링

- 장애인의 실제 이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활동

추진 경과

- 대선 후보자 공약 촉구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요구 : 광역 간 이동지원시스템 구축, 교통바우처제 도입 등 서비스 이용환경 통합, 장애인주차제도 차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개정 및 통합, 주무부처 변경, 저상버스 이용한 승·하차 인프라 구축, 여객시설 인적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

- '22.01.25.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초청 간담회
- '22.04.0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요구 사항 제안
- '22.04.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계 초청 간담회
-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 활동을 통한 이동·편의 개선 정책 활동 (※진행상황 확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내 이슈&활동 > 제도개선 게시판 참조)
- '22.03. 지하철개찰구 개방시간 개선요청
- '22.05.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요청
- '22.06.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 요소 배치 요청
- '22.06. ICT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 '22.07. 장애인특수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22.08. 서울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22.11.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 '22.11.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22.03.22. 서울교통공사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비판 논평
- '22.03.28. 이준석 대표 전장연 지하철시위 관련 혐오 발언 비판 논평
- '22.03.31. “일상의 목숨 건 사투,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을 통한 이슈화
- '22.07.04.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의원 이상민·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공동주최)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한국장총, 2022.07.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2.09.0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 이동권 특위 구성, 장애인 이동권 정책제안 5가지 대통령 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콜택시 개선,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대중교통 유니버설 디자인화, 장애인친화적인 이동편의 증진 인식)
- '22.09.2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단체 제안 보고서 과제 제안 :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 및 접근성 제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지역 간 이동성 제고,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등
- '22.12.05. 서울지하철공사 상대 단차소송 관련 "소송비용 피해자 부담이어서 안된다" 성명 배포

핵심 성과

새 정부 국정과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동 접근성 향상 관련 지향점 제시, 과제 반영

- 국정과제 :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윈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 포함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이동 가능한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개선(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및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지원기준 마련) 등 (23.1.31. 공청회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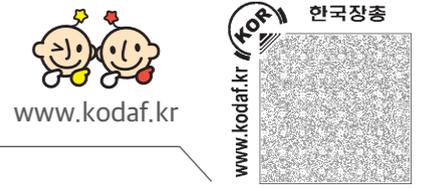
일상생활 제도개선 정책 활동 지속 전개, 진행 경과 공유 및 공론화

- 제도개선 솔루션 활동 통한 제도개선 활동(연간 8건 제안 / 개선(예정) 3건, 일부반영 1건, 진행 중 4건), 한국장총 홈페이지 통한 진행 경과 공개, 보도자료 및 SNS 등 활용 사회적 이슈화

향후 과제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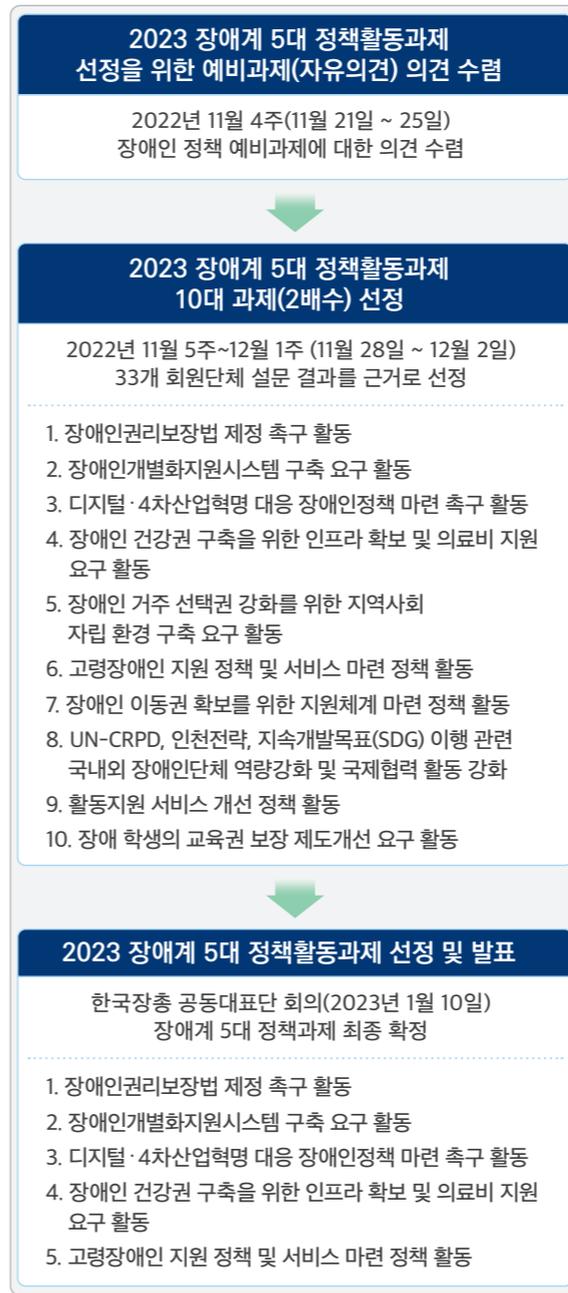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이동권 강화 정책 추진 모니터링과 개선 요구 활동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이동권 강화 정책 구체적 목표 설정, 이행 확인, 중간 평가 등 지속적 정책개선 활동 필요



03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2023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 과정



2023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 배경

- 한국장총은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22.11.21.~25.) 등 33개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를 선정 ('22.11.28.~12.2.) 후 2023년 1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
- 탈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장애개념의 재정의와 장애인 권리 조항 명시, 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활동을 포함해 총 5개 정책활동과제가 선정되었음

2023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활동 과제 및 목표

- 제21대 국회 내 장애인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계 통합안) 제정 추진과 법 제정 필요성 공론화
-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정책 책임관계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 국회 제정 재논의 촉구, 여·야 간사 면담 요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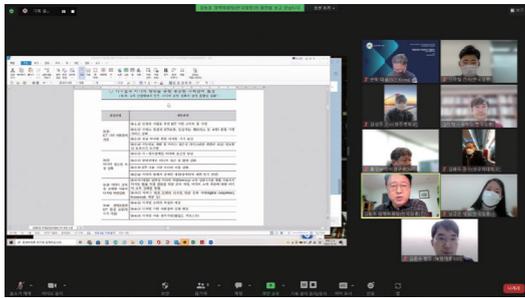


2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예산제, 등급제폐지 후속조치 등) 요구 활동

활동 과제 및 목표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과정 장애계 참여 확대 요구 및 의견 개진
- 사회참여, 돌봄, 요양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분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요구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관련 정책개선 요구,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요구 등

3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TF) 2차 회의 (한국장총, 2022.12.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 과제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 배제를 방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로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실현
- 정보접근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장애계 관심 확대
- 학계·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 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TF) 본격 운영, 장애계 의견수렴 참여 확대로 정책 논의 구조 마련

- 웹·모바일 접근성 및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 범부처 디지털포용기술 보급 운영 현황 모니터링

4 장애인건강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

활동 과제 및 목표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요구 활동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정립 요구
- 장애인 주치의 제도 본사업화 촉구 활동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확충,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운송수단 확대 및 병원이송센터 확충 요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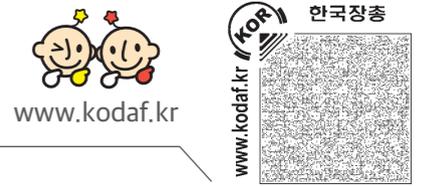
5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활동 과제 및 목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포괄적 장애 고령화 반영 정책 수립 촉구
-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 정립 위한 현황조사, 지원 필요성 촉구
-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욕구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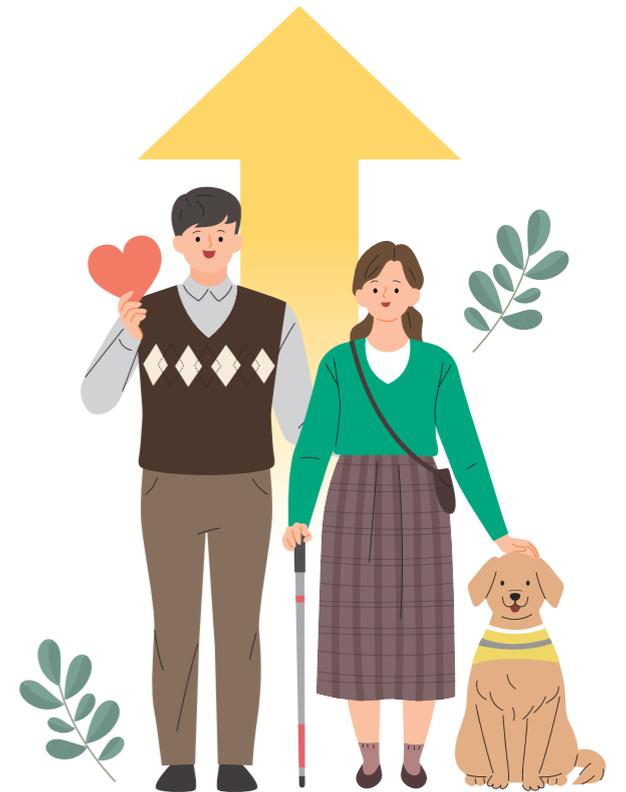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 기조강연 '행복한 삶을 위한 Active Aging' (한국장총, 2022.12.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3 장애계 정책 활동 주요 추진방향

- 올해는 3년간의 코로나-19 시기 이후 일상 복귀를 모색하는 중요한 한해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임
- 따라서 지난 정부 주요 과제인 장애인권리 보장법의 21대 국회 내 제정을 위한 재추진과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이동권지원정책의 내실화,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포함한 건강권 강화 요구 등을 위해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임
- 나아가 디지털·4차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 등 시대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계 의견을 제안, 정책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임. 이외에도 주요 장애이슈에 대하여 장애인단체는 지역별, 장애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하여 정부의 정책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을 도모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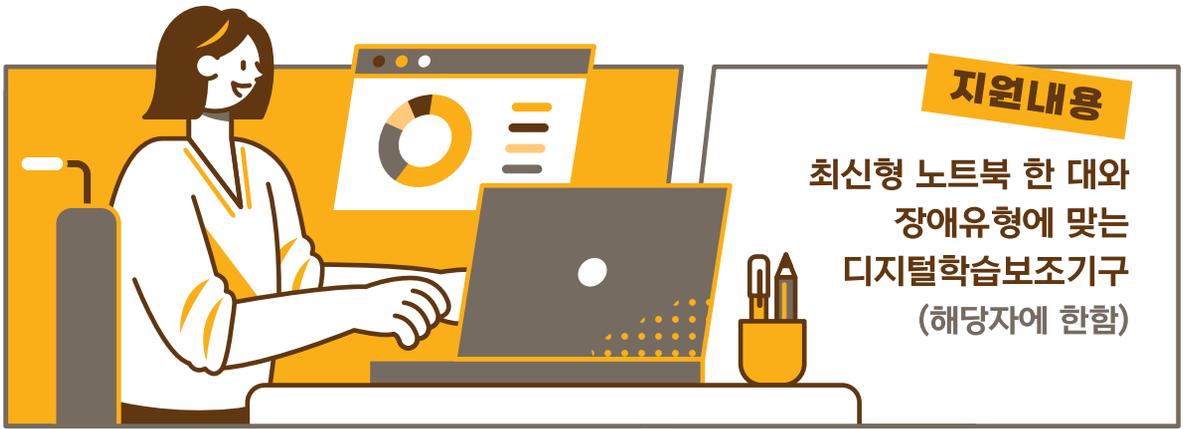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최신형 노트북 한 대와
장애유형에 맞는
디지털학습보조기구
(해당자에 한함)

신입장애대학생 여러분께 노트북을 선물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대학교 및 전문 대학에
2023년 3월 입학한 등록 장애 대학생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제외)



신청

2023. 2. 20. 월 ~
3. 10. 금 오후 2시

KODAF.KR '협력&나눔' 에서



KB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지원
자세한 사항은 KODAF.KR 참조

KB 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9년부터 신입장애대학생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트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